

설립부터 상속까지... 조사과정서 증거 쏟아져

검 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지난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설립 과정, 인사 등 운영 주체, 비자금 활용, 상속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‘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’라고 결론내렸다.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수두룩하게 쏟아져,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▲설립 1985년 이명박 자금으로 설립

검찰 조사에 따르면 다스는 설립할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이 들어갔다. 이 전 대통령은 1985년께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 회사 정세영 회장으로로부터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 받았다. 이후 이 회사 관리부장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 “내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하나 만들어 키우려고 하니, 네가 설립해서 일을 하라”고 지시했다.

이에 따라 김성우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창업 준비금을 받아 다스 설립에 나섰다.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으로 건넨 개인 돈은 3억9600만원이었다.

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설립된 다스의 지분을 분산해 차명보유했다. 주주명부에는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와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차명 등재했으며, 이 전 대통령은 1985년 자신의 주식 2만6400주를 김씨에게서 이상은 회장으로, 1988년에는 김씨에게서 친구인 김창대씨로 각각 이전했다.

▲운영 임직원 인사 등 이명박 뜻대로

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. 특히 주요 임직원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뜻대로 단행됐고, 대부분 측근이 영입됐다.

이 전 대통령은 1987년 7월10일 김성우 전 사장을 다스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해 다스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했고, 현대건설 직원인 권승호씨를 퇴직시켜 다스 관리차장으로 삼았다. 권씨는 이후 다스 전무이사까지 승진했다.

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패에서 외곽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강경호씨를 다스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, 청와대 총무비서관로 근무했던 신학수씨를 다스 감사로 임명했다.

이 전 대통령은 김성우 전 사장, 권승호 전 전무로부터 매년 다스 결산내역, 자금운용상황, 임직원 인사 급여 등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. 또 대규모 설비투자, 신규 외주업체 선정, 해외지점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받고 처리방향을 지시했다.

2008년부터는 매제인 김진씨를 총괄부사장으로 임명했으며 김진, 이동형, 강경호 등으로부터 다스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. 아들 이시형씨를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 후에는 이 씨를 통해 현안보고를 받았다. 이 전 대통령은 주요 임원들의 급여액수도



뇌물수수 및 직권남용,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, 횡령·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.

이씨를 통해 직접 결정해 집행했다.

▲비자금 이명박의 비밀 금고... 선거마다 동원

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수익창출 창구이자 비밀 금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. 선거 등 돈이 필요할 때 마다 돈을 대어주는 창구가 된 것이다.

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관리인이었던 김재정 다스 전 사장, 이영배 금강 대표 등

을 통해 비자금 330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.

이를 자세히 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의원실, 지구당 사무소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강모씨의 급여 4억3000여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했다.

다스 직원 정모씨에게 선거사무소 경리업무를 맡기는가 하면, 다스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자서전 수

천권을 구매하도록 하기도 했다.

선거에도 다스가 적극 활용됐다.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는 김재정 전 사장, 권승호 전 전무 등을 통해 다스 법인자금을 받아 선거경비로 사용했고,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 등을 유세에 동원하기도 했다.

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당시에도 김재정 전 사장 등을 동원해 차명보유 자금을 경선자금으로 사용했다.

또 아들 시형씨는 차명주주들의 배당금 지급 계좌를 관리했는데,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 4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.

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5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예쿠스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,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다스 법인카드를 1796여회나 사용하기도 했다.

1985년 이명박 개인 돈으로 설립
핵심 임직원 MB 측근으로 채워져
주요 선거 때마다 ‘현금 인출기’ 역할
아들 이시형에게 상속 치밀하게 준비

▲상속 아들 이시형에게 물려주려

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지배권을 아들 시형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. 형인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대거 이시형씨에게 넘기는 방안이 이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추진됐다.

이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시형씨에게 해외법인에 대한 모든 사항, 1000만원 이상의 모든 비용 품의 등에 대해 결재권한을 주는 등 사실상 다스 운영을 장악하게 해줬다.

또 강경호 다스 사장은 다스 차명주주였던 이상은, 권영미, 김창대, 이동형씨 등 몰래 다스 지배구조를 시형씨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M&A 전문가에게 지배구조 개편안 자문을 구하고, 이를 시형씨에게 보고했다. 그러나 이 자문안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최종 실행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이후 2011년 김백준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은 대통령 퇴임 후 활동 계획과 재원 등에 관한 기획안, 일명 PPP(Post Presidency Plan)를 작성했다.

이 보고서는 ‘이상은 회장의 DAS(다스)지분 중 5%는 시형씨에게 상속 증여함으로써 시형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’, ‘이상은 회장의 DAS 지분은 유상증자 준비과정에서 상속증여세 상 혜택이 있는 5%는 이명박 재단에 출연해 VIP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다.

검찰은 이 보고서가 실행될 경우 이상은 회장의 지분은 대부분 소멸하는 대신, 시형씨는 다스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.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보고되지도, 승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결론내렸다. /이상민 기자

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?

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,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.

아십니까?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



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.



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.



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.



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



대한적십자사
후원문의 1577-8179
(민원선)

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	
01 취미계통 맞춤형 지원	51,370,679,216
02 국내 재난 구호활동	16,359,898,992
03 해외 구호활동	4,079,359,901
04 인건 지식보급	5,733,677,999
...	...
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	...

홍보대사 류수영